

# “누리에산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 김승환 포함한 시·도 교육감들, 추경 심사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 반영” 강력 요구

다음주 예정인 추가경정 예산안의 본격 심사를 앞두고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경편성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 예산은 2017년도와 2018년도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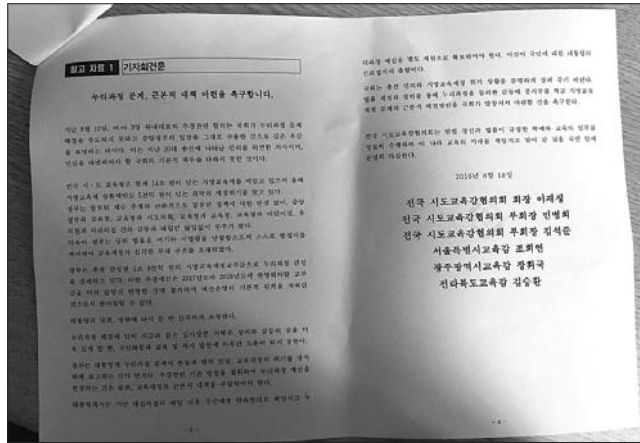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포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김석준 부산시교육감(부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휘국 광주교육감

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추경 관련 합의는 국회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외면한 처사이자 민심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들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고 올해 상환액만 5,000억원이 넘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세수 추계와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정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청과 유치원·어린이집의 갈등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해결과 관련해 자금과 같은 임시방편 처방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뿐이지 교육 및 복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문

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회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서 “추경 관련 기본 방침을 철

## 시민·사회단체 90곳 사드 반대 공동체 결성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90곳이 공동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등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90곳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결성했다.

이들은 “북핵 미사일을 사드로 막기 어렵다는 것은 한미당국이 스스로 밝힌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체를 출범해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 체계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는 것이며, 오히려 동북아시아에 정치·군사적 대결 구도를 불러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정부가 국민 동의 없이 했다는 점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로 말미암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 체계 구축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심화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 전북대 학생들, 중소기업 제품 수출 성과

### 미국 무역 박람회 참여 ‘협동조합 온리’의 수출 상담...5000달러 계약 체결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창업연구사업단(단장김민호·이하 GTEP사업단) 학생들이 해외 무역박람회에 참여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 사업단 강은진(25·무역학과), 문정운(25·무역학과), 박다선(23·사학과) 학생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 열린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박람회(ASD LAS VEGAS)’에 참가해 사업단 협력기업인 ‘협동조합 온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협동조합 온리’는 사무실 등에서 파쇄기로 잘려져 재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파쇄종을 한지제작 방식 등으로 재탄생시킨 폐종이를 이용해 친환경 문화 수공예품을 만드는 업체로 전주와 서울에 매장이 있으며 주로 중국과 수출을 진행 중이다.

이 박람회에서 전북대 학생들은 4일 동안 40여 업체와 8만 달러 상당의 상담을 진행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최근까지도 바이어들과 지속적인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웨딩업체 담당 바이어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전북대 GTEP 사업단 학생들

추가 계약으로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수공예 카드에 깊은 관심을 표한 여러 미국 바이어와 추후에 미팅을 잡아 구체적인 협상 약속을 하는 등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

강은진 학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기

업의 우수한 제품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무역의 실제 현장을 체험해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며 “해외 바이어들의 다양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 개최

### 내일부터 5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북도는 제2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태권도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국대회로 2회제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태권도 종주도 태권도 정신과 맛을 경험하고 태권도문화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전승·발전시키는 대표문화관광상품의 태권도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2회 태권도원배전국태권도대회는 앞으로 1년 후 있을 2017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태권도문화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전승·발전시키는 대표문화관광상품의 태권도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국민 34.2% 최우선 근절범죄 ‘성폭력’

### 가정폭력 26.1%·학교폭력 22.5%·불량식품 16.5% 순

대다수의 국민들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중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할 범죄로 ‘성폭력’을 꼽았다.

국민안전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상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안전 체감도는 안전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2~6월 19세 이상 일반 국민과 중·고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 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4대 중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에 대한 안전 체감도 등 19개 항목을 조사했다.

올 상반기 국민들이 최우선 근절분야로 지정한 4대악은 성폭력이 34.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가정폭력 26.1%, 학교폭력 22.5%, 불량식품 16.5%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4년 상반기 1만3080건, 2015년 상반기 1만3270건, 2016년 상반기 1만312건으로 감소했고 같은기간 재범률도 5.5%, 5.5%, 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성폭력관련 객관적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지만 성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2013년 하반기 49%, 2014년 상·하반기 각각 45%, 42.5%, 2015년 상·하반기 33.6%, 30.5%로 각각 꾸준히 감소하다가 올 상반기 33.7%로 증가했다.

이는 올들어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5월), 삼마를 여고사 성폭행(6월) 등 여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한동안 감소하던 불안감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4대악 중 최우선 근절분야로 가정폭

력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16.2%)보다 올 상반기 26.1%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가 다수 적발되며 따른 영향으로 안전처는 분석했다.

특히 올해 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올 상반기에 꺾였다. 가정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4년 상·하반기 17%, 15.6%에 이어 2015년 상·하반기에도 13.9%, 11.4%로 매 반기 마다 하락했지만 올 상반기 18.1%로 증가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안전하다’는 응답도 2013년 하반기 12.2%에서 올해 상반기 24.5%로 두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안전 체감도는 올해 상반기 75.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3.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은 불안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정부는 제25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난안전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점검 분야로는 ▲소방·해경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국민안전처) ▲교통시설 안전관리대책(국토부) ▲해양안전 강화(해수부) ▲가족전염병 방역관리체계 개선(농식품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복지부) 등이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송은정(1969.07.16.생 2016.06.03.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허윤범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체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사건번호: 2016년656 상속한정승인 판사 허윤범
- ▶ 피상속인: 망 송은정 (1969.07.16.생 2016.06.03.사망)
- ▶ 취주소: 전주시 완산구 덕적길2길 25, 101동 1307호 (평화동 1가 주공아파트)
- ▶ 공고인: 박지은
- ▶ 한정승인수리일: 2016. 7. 28.
- ▶ 공고기간: 2016. 8. 19. ~ 2016. 10. 18.
- ▶ 연락처: (청구인 박지은의 주소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신내로 519-1, 다동 208호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